



2022.03.24

대한민국의 CPTPP 가입에 대한 BSA | THE SOFTWARE ALLIANCE 의견서

개요

BSA | The Software Alliance(BSA)¹는 본 의견서를 통해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BSA 는 산업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의 CPTPP 가입을 지지하며, 산업부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CPTPP 가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주요 논점	
1.	CPTPP 전자상거래장의 디지털 무역 조항을 수용하면 한국 기업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의 경제 성장 및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2.	CPTPP 가입을 통해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을 확립하는 과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3.	CPTPP 가입 논의 과정에서 한국은 무역 장벽의 제거 및 최소화, 개인정보 및 보안 지원, 혁신 촉진 등 21 세기 디지털 무역 협정의 다양한 주요 목표를 준수해야 합니다.

서문

BSA 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의 선두 주자로서, BSA 회원사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솔루션, 인공지능(AI) 및 머신 러닝, 사물 인터넷 등 데이터 기반 혁신을 이끌어 나가며 세계 경제 성장 및 회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BSA 는 디지털 무역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는 정부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사에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BSA 는 CPTPP 가입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합니다. CPTPP 에 가입하고 전자 상거래 장의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조항을 수용함으로써 한국은 소프트웨어 개발, 클라우드 컴퓨팅,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본 의견서에서 BSA 는 1) CPTPP 의 디지털 무역 조항이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 것인지, 2) CPTPP 가입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무역 규범

¹ BSA's members include: Adobe, Alteryx, Altium, Amazon Web Services, Atlassian, Autodesk, Aveva, Bentley Systems, Box, Cisco, CNC/Mastercam, Dassault, DocuSign, Dropbox, IBM, Informatica, Intel, MathWorks, Microsoft, Nikon, Okta, Oracle, PTC, Rockwell, Salesforce, SAP, ServiceNow, Shopify Inc., Siemens Industry Software Inc., Splunk, Trend Micro, Trimble Solutions Corporation, Twilio, Unity Technologies, Inc., Workday, Zendesk, and Zoom Video Communications, Inc.

확립이라는 한국의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3) CPTPP 가입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CPTPP 디지털 무역 조항이 한국 기업에 가져올 이익

한국은 전 세계에서 디지털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² 2018년 기준 15억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의 공용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2023년에는 31억 달러로 2배가량 성장해 국민총생산 450억 달러와 5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³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게임업체 등 디지털 기반 산업이 한국의 디지털화의 주요 동력원이지만, 소매업체 및 대기업들이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함에 따라 이들 역시 한국의 디지털화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⁴ 실제로, 의료 및 제조업부터 농업과 소매업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기술은 기업의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수출,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생산성 향상, 신규 고객 개발, 공급망 관리 및 연구 개발 진행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연결성이 경제 활동, 일자리 창출, 사회 복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무역 장벽이 강화되고 디지털 보호무역주의가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약 80여 개국이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수출 및 기타 무역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했으며, 국경 간 데이터 및 정보 이동을 제한하는 디지털 무역 장벽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저장 위치를 철저히 자국 내로 한정하여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는 디지털 무역 장벽 중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현지화는 불필요한 비용 및 불확실성을 발생시켜 사업과 투자를 저해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디지털 무역 장벽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국내 기업의 혁신 기술 접근을 제한하여 국제 공급망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것
- 국내 기업의 데이터 분석을 제한하여 AI 및 머신 러닝 등 대규모 데이터에 의존적인 신흥 기술의 개발 및 투자를 저해하는 것
-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가공 및 보관 시설 사용을 제한해 막대한 불필요 비용을 발생시켜 투자 및 연구개발 대상국으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저해하는 것
- 관계국 간 상호 운용이 불가능한 법률로 국외 이동을 방해하는 것

CPTPP의 전자상거래 조항은 데이터 이전에 대한 관계국 간의 규범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합니다.

- 제14.11조(국경 간 전자 정보 전달에 관한 조항)는 CPTPP의 모든 참가국들이 참가국과 관련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인 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² Korea has topped the Bloomberg Innovation Index for seven of the last nine years. See: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2-03/south-korea-leads-world-in-innovation-u-s-drops-out-of-top-10?sref=d8oB8qmA>.

³ BCG, "Ascent to the Cloud: How Six Key APAC Economies can Lift-Off", October 2019, https://web-assets.bcg.com/img-src/Ascent_to_the_Cloud_Report_21Oct_tcm9-231826.pdf (BCG Report).

⁴ BCG Report (2019).

- 제14.13조(컴퓨팅 설비의 위치에 관한 조항)는 CPTPP 참가국들이 참가국의 영토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해당 국가 내의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SA 는 한국 정부가 CPTPP 의 디지털 무역 규정에 따를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CPTPP 디지털 무역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상술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급성장하는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무역 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

BSA 는 산업부가 발표한 2022 년 업무 계획에서의 핵심 목표가 한국을 세계 디지털 무역 시장에서 선도국으로 부상시키는 것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무역 규범을 확립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⁵ 또한 BSA 는 2021 년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을 타결하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정식으로 가입을 요청하는 등 뜻을 같이하는 협력국과의 디지털경제협정(DEA) 체결에 적극적인 한국의 움직임 역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 규범 논의에 대해 한국이 보여준 적극적인 태도는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디지털 무역 규범은 일자리 창출, 경제적 경쟁력 강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 AI, 스마트 기기 및 기타 신형 기술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혁신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경제 성장과 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에 따라 변화하는 기술 및 데이터의 역할이 디지털 무역 규범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는 더욱 부각됩니다.

CPTPP 의 전자 상거래 장은 DEPA, KSDPA 와 달리 신형 디지털 무역 사안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러한 DEA 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DEPA 를 위시한 여러 디지털 무역 협정들을 살펴보면, 국경 간 데이터 전송 및 컴퓨팅 설비의 위치에 관련된 조항 등 CPTPP 의 많은 조항이 모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오스트레일리아 디지털 경제 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디지털 무역 장 등) 이렇듯, CPTPP 는 여전히 디지털 무역 규범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CPTPP 가입은 국제 사회가 한국이 CPTPP 의 높은 수준의 전자상거래 규정을 준수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인지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CPTPP 가입을 통해 유럽연합 (EU), 동남아국가연합 (ASEAN), 인도 태평양 지역 등 거대한 경제 수역과의 DEA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⁶

협정 가입 논의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

CPTPP 디지털 및 데이터 관련 조항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때, BSA 는 한국이 다음과 같은 21 세기 디지털 무역 협정의 주요 목표를 참고할 것을 제언 드립니다.

무역 장벽 철폐 및 최소화

⁵ 2022 MOTIE Work Plan, December 2021, https://www.motie.go.kr/common/download.do?fid=bbs&bbs_cd_n=81&bbs_seq_n=165095&file_seq_n=3.

⁶ In this regard, BSA understands from the 2022 Workplan that there are ongoing discussions with the EU on the Korea-EU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ASEAN on a Korea-ASEAN Digital Agreement, and the US on a digital trade framework for the Indo-Pacific region.

- 데이터 현지화 및 국외이전 제한 철폐. 정부는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데이터 현지화 및 국외이전에 대한 제한을 철폐해야 하며, 데이터 전송을 촉진할 수 있는 관계국 간 상호 운용 가능한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데이터 및 서버 국내화 요건 등 인증 요건을 부과하는 클라우드보안인증제도가 일부 민간 업종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⁷
 - CPTPP의 전자상거래 규정이 정부 조달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고, 공공 부문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데이터 현지화 정책은 CPTPP의 전자상거래 규정(제14장)과 DEA의 정신에 반합니다. 클라우드보안인증제도의 민간 부문으로의 확장은 각각 데이터 전송과 데이터 현지화에 관한 CPTPP 제14.11조 및 제14.13조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 관세 부과 철폐. 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부과를 피해야 합니다.
- 국제 표준 준수. 정부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따르고 이와 상충되는 임의의 기준을 설정하여 시장 참가자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 기술 공개 강요 금지. 정부는 기업의 시장 진입에 대한 조건으로 소스 코드 또는 영업 비밀과 같은 기술을 공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불공정한 자국 기업 우대 정책 금지. 정부는 보조금 지급과 같은 차별적인 규제를 통해 자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우대해서는 안 됩니다.
- 투자 및 수출 제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 및 수출 제한은 상업적 연구개발과 국제 무역을 저해하지 않는 동시에 국가 안보의 핵심 목적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조달 정책. 조달 정책은 정부가 국내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포함한 최첨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21세기 정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정부 기관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소프트웨어만 사용해야 합니다.
- 선택의 자유 보장. 기업 및 기관은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기업 및 기관이 자국 기술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지원

- 개인 정보 보호. 정부는 불필요하거나 위장된 무역 장벽을 발생시키지 않고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 암호화를 통한 보안. 정부는 상업 제품의 암호화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정보 및 기술 누출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보안 기술을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 IT 공급망 보호. 정부와 기업 및 기관은 국제 표준에 기반한 사이버 및 공급망 위험 관리 및 취약성 공개 프로세스 등을 통해 사이버 및 공급망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를 완비해야 합니다.

⁷ For example, in July 2020,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announced that they will require CSAP-certified CSPs in their new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certification criteria for the healthcare industry.

- 공정하고 투명한 데이터 접근권 요청. 정부는 정보 및 데이터 접근에 관한 법률 집행에 있어 철저적인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립하고 적법한 항소 방법을 보장해야 하며, 관할 당국 간의 상이한 법적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혁신 촉진

- 머신 러닝 및 데이터 분석. 정부는 머신 러닝 과정에서 상용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정부 데이터 개방. 정부는 민감하지 않은 정부 데이터를 기계 관독이 가능한 양식으로 공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법적 책임의 제한. 정부는 법률을 통해 제3자의 기술 활용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서 기술 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적절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 저작권. 정부는 적절한 저작권 예외와 제한 규정을 통해 저작권 규제가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권리 보유자로부터 통지를 받는 즉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제거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회피 조항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특허 및 영업 비밀 보장. 정부는 차등 없는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민법 및 형법으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 지원. 정부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 연구개발을 기초연구비 및 민관협력 지원 등과 같은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 정부 기관에서의 혁신 기술 활용. 정부는 공공 부서의 운영 과정에 있어 혁신 기술 사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 전자 서명. 정부는 상업 거래에서의 ‘스마트 계약’을 포함한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론

저희의 의견이 한국의 CPTPP 가입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견서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 및 추가 요청 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저 없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m Shen Hong

Tham Shen Hong
Manager, Policy – APAC